

2018 정부업무보고

#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



법무부

# 보고순서

---

1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 
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

---

2 국민의 행복한 삶의 토대가 되는  
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

---

3 국민이 체감하는  
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

---



법무부

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

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

#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 보호

##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

- | 적폐청산 수사 철저, 5대 중대부패범죄 단속 강화
- | 방위사업비리, 국부유출 비리 엄단
- | 국고보조금 비리 집중 수사로 재정누수 방지

### ■ 5대 중대부패범죄 단속 ('17년)

뇌물·알선수재·알선수뢰·횡령·배임

1,254 명 단속

346 명 구속

## 사회 공정성·투명성 저해 범죄 엄단

- | 공공기관 인사·채용비리, 교육비리 수사
- | 일감 몰아주기,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 엄단
- | 금융범죄,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단속

### ■ 주요범죄 단속 현황



공공기관 인사·채용비리  
( '17. 7. ~ 12. )



불공정행위 사범  
( '17. 1. ~ 12. )

#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 보호

## 국민안전 위협 부패범죄 실효적 단속

### | 건축·소방·교통 분야 불법·비리 단속

- 소방시설 불법개조, 불량시공, 공무원의 묵인

### | 환경·식품·보건 분야 부패 수사

- 인허가·보조금·납품 관련 업체·브로커와 공무원 유착



## 서민경제 침해 범죄 엄단

### | 다단계, 유사수신, 불법사금융 철저 단속

- 중요 단속사례 적극 홍보, 유관기관과 다각적 대응

### | 보이스피싱, 가상화폐 관련 불법, 보험사기 엄정 대응

- 보이스피싱사범 DB 활용,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운영

### ■ 보이스피싱 범죄 엄단



# 경제정의 개혁입법 적극 추진

## 경제민주화를 위한 「상법」 개정 추진

### |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경영감독 실질화

- 다중대표소송제 도입

### | 의결권 행사 활성화, 소수주주 대표의 이사 선임 확대

- 대규모 상장회사에 전자투표제·집중투표제 의무화

#### ■ 「상법」 개정안 내용

##### 다중대표소송제 도입

자회사의 경영책임을 모회사를 통해 물을 수 있게 함

##### 전자투표제 의무화

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 가능

##### 집중투표제 의무화

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주주권으로 집중투표 가능

##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 강화

### |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

- 담합 등 소액·다수 피해발생 분야의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

### | 어음 제도의 투명성·안정성 제고

-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일원화 입법 추진

#### ■ 「집단소송법」 개정



# 경제정의 개혁입법 적극 추진

## 상가·주택 임차인 보호 입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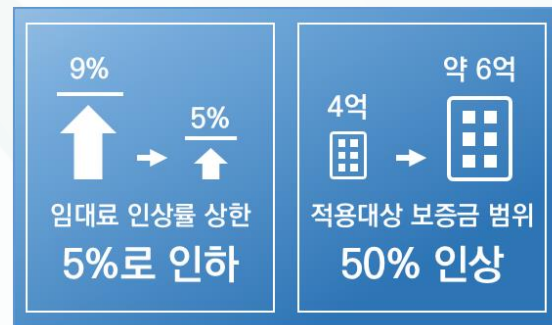
###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

- 계약갱신청구권 연장, 철거·재건축시 임차인 보호

###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

-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, 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

■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개정('18. 1.)



##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

###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가계부채 부담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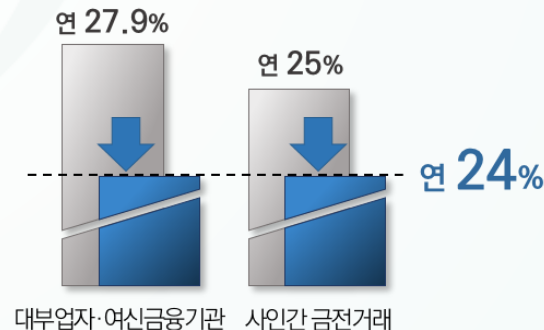
- 법정 최고금리 단계적 인하,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리 강화

### 재도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산법제 개선

- 범부처 통합 구조조정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

### 노인·미성년자녀 등 복지 강화 입법

■ 법정 최고금리 인하 ('18. 2.~)



# 청소년·여성·아동 보호

## 국민참여형 소년 범죄 예방 정책 추진

### | 民官이 함께 청소년을 선도하는 ‘명예 보호관찰관제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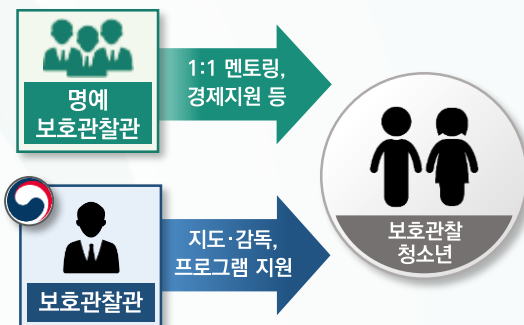
- '18. 1. 현재 퇴직교사 등 명예 보호관찰관 684명 활동

### | 민영소년원 설립·운영 추진

- 민간 자원 및 선도·교화 프로그램 활용, 과밀수용 해소

### | 유명 스포츠선수·연예인과 위기청소년 결연 프로그램

#### ■ 명예 보호관찰관제



## 소년 범죄 대응 체계화·전문화

### |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

- 재범고위험군 전담직원제, 비행예방교육 기반 확충

### |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소년법 개정 논의 지원

### | 범정부 소년범죄예방협의회 신설 운영 추진

- 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수립, 부처간 협업 상황 점검

#### ■ 소년범죄예방협의회





# 청소년·여성·아동 보호

## 젠더폭력 대응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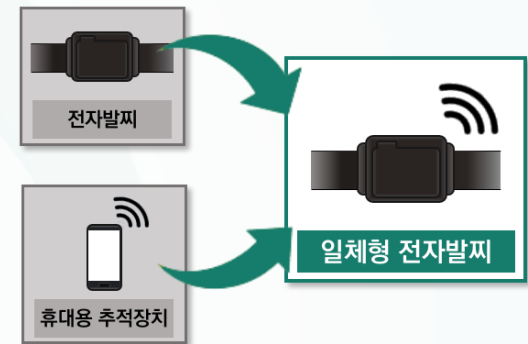
### 성폭력, 가정폭력 엄정 처벌

- 성폭력, 불법촬영·유포, 상습가정폭력 엄벌
- 일체형 전자발찌 운영 등 전자감독 강화

### 젠더폭력 대응 관련 법령 정비

- 스토킹처벌법 제정,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

## ■ ‘일체형 전자발찌’ 도입



##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지원

###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정착

- 신고의무자 법교육 프로그램 활용, 동영상 홍보 등

### 상향된 사건처리 기준 준수로 엄정 처벌

- 아동 사망시 고의여부 불문 구속수사, 법정최고형 구형

### 아동학대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확대

국민일보

2018년 1월 2일

## 檢, 여성·아동 상대 강력살인에 법정최고형 구형

‘살인범죄 처리 기준 합리화案’ 시행

현재 처벌론 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  
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 판단

살인죄 구형량 전체적으로 올리고  
사건별로 구형 기준 구체화시켜

검찰이 새해부터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  
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높인다. 성폭행이  
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

살인죄는 무기징역 구형을 기본으로 한  
다.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나타난  
경우 사형 구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  
다.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여성과 아  
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  
범죄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 
이 검찰의 판단이다. 검찰의 새 구형 기  
준에선 아동이나 노인, 장애인 등 사회  
적 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더  
엄중하게 처벌한다.

국민의 행복한 삶의 토대가 되는

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

# 인권 주무부처로서의 법무부 역할 획기적 강화

##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

### |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인권정책 추진

- '18. 1. ~ 3.까지 총 18개 분야별 협의 실시

### | 인권정책 주무부처로서의 기능 강화

- '18. 5. 기본계획 수립 후 이행상황 점검 및 피드백

#### 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절차



##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 추진

### | 인권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내 이행절차 법제화

-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

### | UPR 등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역량 강화

-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상황 상시 점검



## 형사절차상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

### 수사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인권 보호 강화

#### | 인권옹호기관으로 검찰 역할 재정립

-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 축소, 수사과정 인권감독기능 강화

#### | 검찰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및 내부비리 점검

- 고검검사급 '인권감독관' 활용,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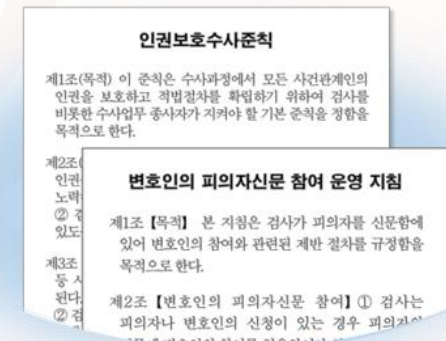
###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증진

#### | 출석·면담·조사 등 모든 과정에서 피조사자 배려

-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추진

#### |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권 확대

- 변호인·피의자 조사중 메모 허용, 부당신문에 대한 이의제기 등
- 개정 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」(17. 12.) 철저 준수



# 형사절차상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

##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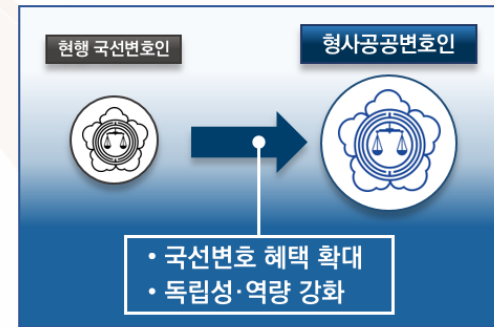
### | 기존 국선변호제도의 확대 개편

- 형사절차에서의 공공변호서비스 강화

### | 도입방안 마련('18년), 단계적 시행('19년)

- 유관기관·단체의 의견 수렴, 관계법령 제·개정 추진

### 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



## 형집행절차에서의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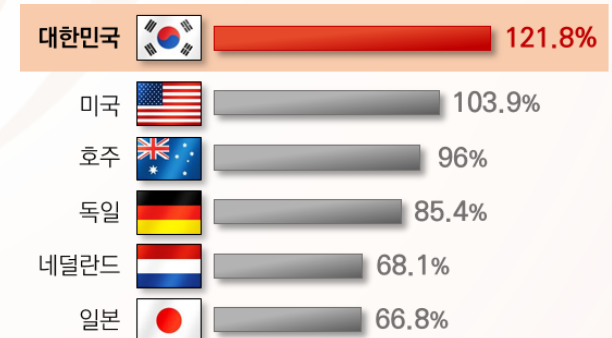
### |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

- 대전교도소 등 4개 기관 신축 등 우선 추진

### | 사회복귀 지원 강화

- 취업지원 및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강화

### ■ OECD 주요국가 교정시설 수용률



#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·지원

##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체계 강화

### |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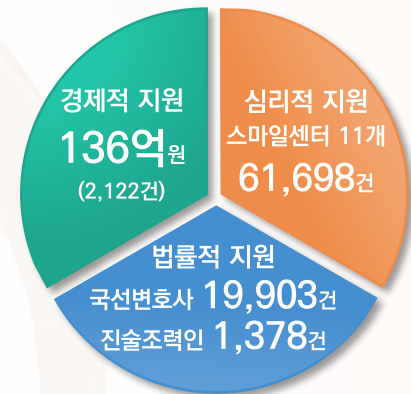
-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 확대

### | 범죄피해자 법률적 지원 강화

-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,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

### | ‘스마일센터’ 추가 설치 등 심리적 지원 확대

■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실적 ('17년)



##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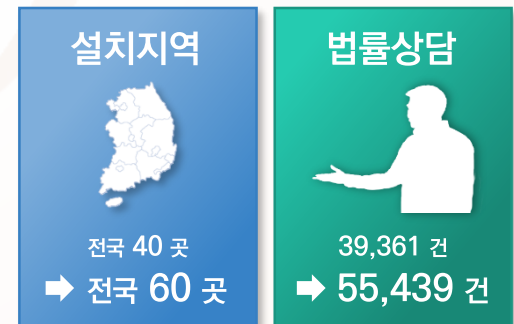
### | 법률홈닥터 증원, 마을변호사 확대 배치

- 제도 홍보 및 전문화로 서비스 내실화

### |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

- 지역 내 법률지원 인력과 ‘통합 법률지원 네트워크’ 구축

■ 법률홈닥터 서비스 확대 ('17년)



국민이 체감하는

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

#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·경 수사권 조정

##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

### |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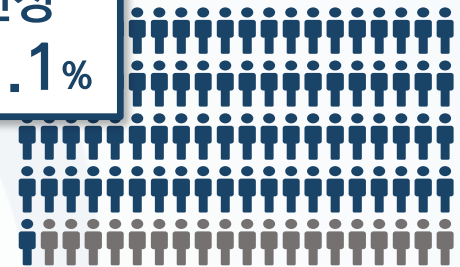
- '17. 10. 법무부안 국회 제출

### |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지원

- '18. 1. 제1차, 제2차 회의 진행

- 공수처 설치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 
- MBC, 2017. 12. 30.

찬성  
81.1%



## 검·경 수사권 조정 추진

### |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지향

-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합리적 방안 마련
- 인권 옹호와 범죄 대응이라는 검찰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

### | 각계 의견 충실히 수렴,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

-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





# 법무부 탈검찰화 및 과거사 진상규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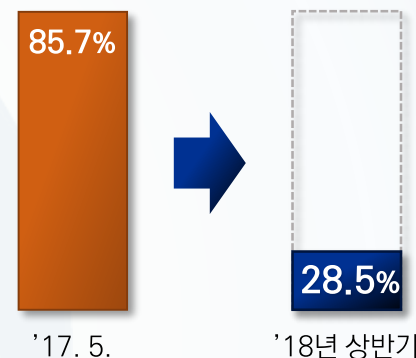
## 법무행정 전문성 강화 – ‘탈검찰화’

| 법무실장, 출입국본부장, 인권국장 非검사 보임 ('17년)

|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

-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 직위 외부 개방 ('18. 1.)
- 종전 평검사 직위 10개 非검사 보임 ('18. 2.) 등 인재 영입 지속

■ 검사 보임 실·국·본부장 비율



##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과거사 진상규명

| 진상규명 대상 과거사 사건 선정 및 진상 조사

- [법무부]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('17. 12.~)
- [대검찰청] 진상조사단 활동 ('18. 1.~)

| 과거 종결사건의 직권 재심청구 여부 지속적 점검

■ 과거사 사건 진상규명 진행경과

위원회-법무부, 조사단-대검 설치협의  
( '17. 10.)

법무부 ‘검찰과거사위원회’ 발족  
( '17. 12.)

대상 사건 선정 및 조사  
( '18. 1.~)

##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

###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

- |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('17. 12.)
  - 중요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외부전문가가 점검
- |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추진
- |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('18. 1.)
  - 기계적 상고 지양, 국민의 시각으로 결정

	검찰수사심의위원회	형사상고심의위원회
구성	학식·경험·덕망·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	교수·변호사 등 형사사법분야 외부전문가 480명
기능	수사계속, 기소 여부 (불)기소 적법성 심사	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 심사

### 자유롭게 소통하는 검찰문화 조성

- | 검찰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
  - 검사 이의제기권 구체화 지침 시행('18. 1.)
  -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지침 시범실시('18. 1.), 시행('18. 4. 1.)
- | 수평적인 소통문화 정착

외부통제 강화

의사결정 투명화

수평적 소통문화

조직문화  
개선

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,  
인권이 존중받는 사회,  
법무부가 실현하겠습니다.

